

# 2024년 정세와 교섭기조

2023년 서비스연맹 교섭담당자학교

강은희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

# 순서

## 1. 정세

- 경제 전망
- 정치
- 노동
- 국가재정

## 2. 교섭기조

- 임금인상
- 총선투쟁
- 산별교섭

#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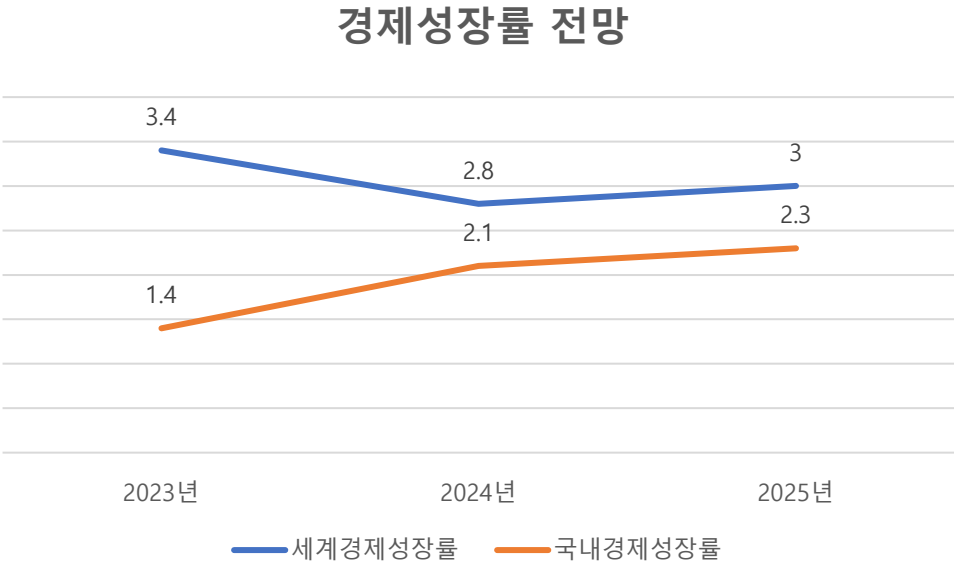
- 세계경제 성장률(%): 23년 2.9 → 24년 2.8 → 25년 3.0

	2022	2023			2024 <sup>e)</sup>			2025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sup>e)</sup>	연간 <sup>e)</sup>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세계경제 성장률(%) <sup>1)</sup>	3.4	2.9	2.9	2.9	2.4	3.1	2.8	3.0
• 미국	1.9	2.0	2.7	2.4	1.8	0.9	1.3	1.8
• 유로지역	3.4	0.8	0.1	0.4	0.5	1.3	0.9	1.6
• 중국	3.0	5.5	5.0	5.2	4.6	4.7	4.6	4.5
• 일본	0.9	1.9	1.5	1.7	0.7	1.2	1.0	0.9
세계교역 신장률(%) <sup>1)</sup>	5.1	0.4	1.1	0.8	3.6	3.3	3.4	3.6
국제유가(달러/배럴) <sup>2)</sup>	101	80	86	83	86	85	85	81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브렌트유, 기간 평균 기준  
자료: 각국 통계청, Bloomberg, 한국은행

# “국내 경제성장률 세계성장률 하회”

- 국내 성장률 전망 (한국은행 11월 전망)  
=> 23년 1.4%(유지), 24년 2.1%(8월 전망 대비-0.1%p), 25년 2.3%



-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회복 모멘텀 약화로 성장률 둔화
- 코로나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2020년(-0.7%), 금융위기 여파에 시달렸던 2009년(0.8%), 그리고 올해(1.4%)를 제외하면 2000년대 들어서 가장 낮은 수치

# OECD 11월 경제 성장 전망률

Time	6월 예측	11월 예측
<u>Japan</u>	1.27	1.71
<u>Korea</u>	1.49	1.36
<u>United States</u>	1.56	2.36
OECD - Total	1.36	1.66
korea-oecd	0.13	-0.29
korea-japan	0.22	-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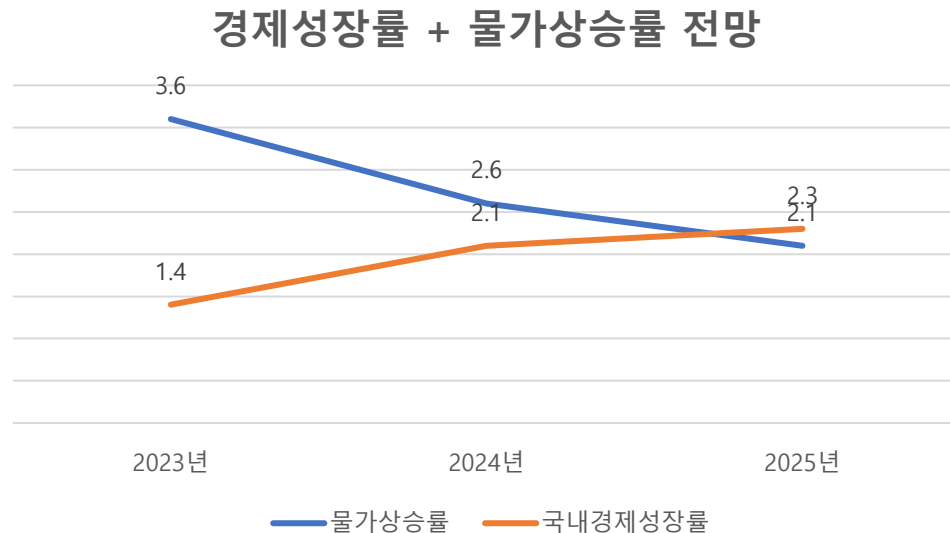
# “민간소비 둔화는 고물가 고금리 때문”

### • 물가상승률 전망

[소비자물가] 23년 3.6%(+0.1%p), 24년 2.6%(+0.2), 25년 2.1%

[근원물가] 23년 3.5%(+0.1), 24년 2.3%(+0.2), 25년 2.0%

※ 근원물가지수 : 농산물, 원자재와 같은 가격변동이 심한 것을 제외하고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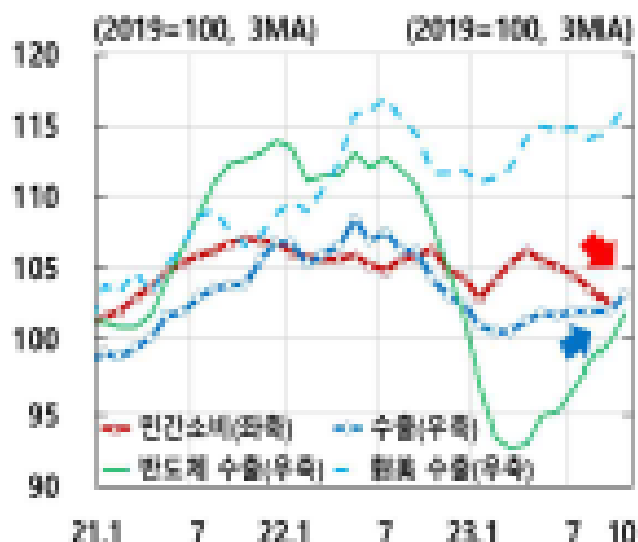
문제는 불확실성!!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흐름,  
이차 파급영향의 정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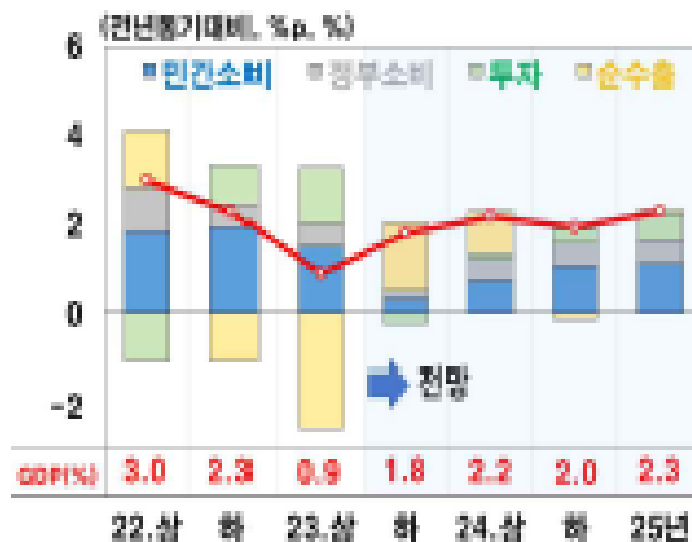
소비회복세 더딘 반면  
수출은 IT·對美 중심으로 개선

[그림 2.1] 수출·소매판매<sup>1)</sup>



향후 순수출 중심으로 나아지다  
내년 하반기 이후 내수 점차 회복

[그림 2.2] 지출 부문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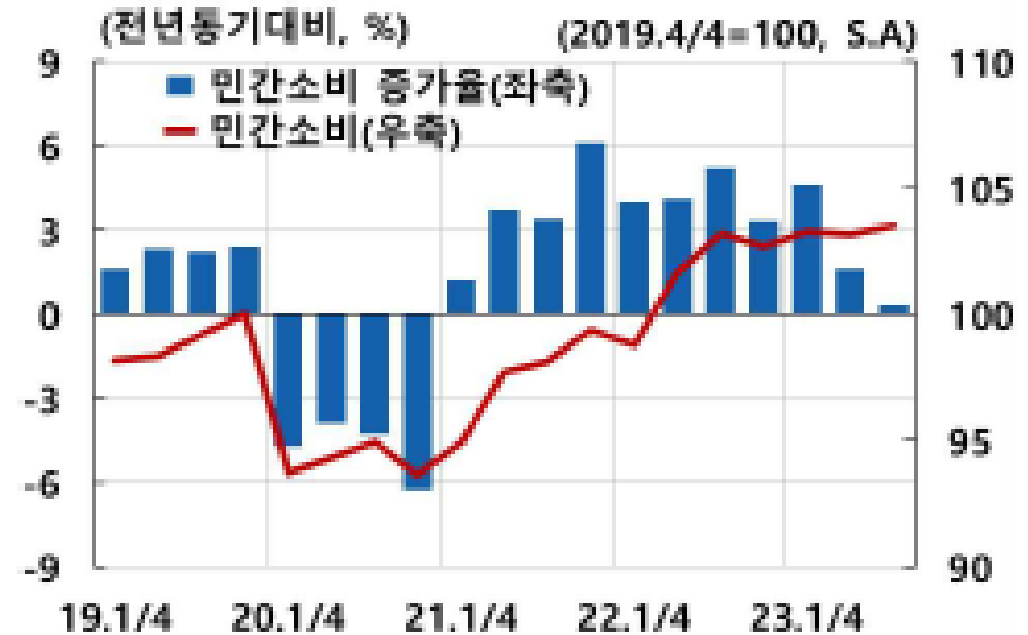
- 수출이 반도체경기 반등, 양호한 미국 성장세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빠른 증가세

# “경제성장률을 밀도는 민간소비증가율”

- 24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3년(1.9%)과 비슷한 1.9%를 나타낼 전망
- 소비 형태별로는 재화·서비스 국내소비가 고금리 및 펜트업 수요둔화로 회복세가 완만하겠으며 해외소비는 해외여행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빠르게 회복

### 민간소비 회복세 더딘 모습

[그림 2.4] GDP 민간소비



자료: 한국은행



# “서비스노동자에게 암울한 경제전망 ”

〈경제성장 전망〉

(전년동기대비, %)

	2022	2023		2024 <sup>예</sup>		2025 <sup>예</sup>	
	연간	상반	하반 <sup>예</sup>	연간 <sup>예</sup>	상반	하반	연간
GDP 성장률 <sup>1)</sup>	2.6	0.9	1.8	1.4	2.2	2.0	2.1
• 민간소비	4.1	3.1	0.7	1.9	1.5	2.2	1.9
• 설비투자	-0.9	5.3	-5.8	-0.4	0.8	7.5	4.1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5.0	2.9	1.3	2.1	2.8	2.1	2.4
• 건설투자	-2.8	1.8	3.6	2.7	0.5	-3.7	-1.8
• 재화수출	3.6	-0.9	5.4	2.3	4.1	2.7	3.3
• 재화수입	4.3	1.9	-2.1	-0.2	0.7	4.1	2.4

자료: 한국은행

# “서민 등골 휘는 물가인상”

## 6월 라면 물가상승률 13.4%...14년 4개월 만에 최고치

입력 2023.07.05 (10:13) | 수정 2023.07.05 (10:16)

## 연말 물가 부담 한숨 덜었지만...밥상엔 금사과·금대파

전민정 기자  
입력 2023-12-05 10:47

+ 구독

<

🔊

⋮

11월 소비자물가 3.3%...년말째 3%대 속 상승폭 둔화  
신선식품은 12.7% 급등...농산물값, 2021년 5월 이후 최대 상승  
석유류는 5.1% 내려...국제 유가 하락 등 영향

랭킹뉴스

증권·경제

산업

## 풀무원 핫도그 하나 어디 갔어?...봉지 뜯었다가 '깜놀'

소비자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 확산

윤진섭 기자 입력 2023.11.12.09:26 수정 2023.11.14.14:49

## 소주·맥주 가격 인상... 외식물가도 '깡충' 서민 등골 휜다

이규호기자leekh@kwnews.co.kr 2023-11-10 00:00:00

하이트진로 소주·맥주 가격 7%가량 올려  
자영업자들 주류 판매가격 올릴 수밖에  
외식가격도 천정부지 서민 먹거리 물가불안

## 2023년 11월 지출목적별 동향

(기준년도 2020=100, %)

지출목적별 부문	품목수	가중치	지수	동락률	
				전월비	전년동월비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40	154.5	119.34	-2.6	6.2
주류 및 담배	7	16.5	104.83	1.3	1.7
의류 및 신발	25	48.6	113.48	1.0	5.7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15	171.6	113.73	-0.1	2.8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50	53.9	113.61	-0.3	4.8
보건	34	87.2	102.83	0.2	1.7
교통	33	106.0	115.32	-1.8	-0.1
통신	6	48.4	101.04	0.0	0.4
오락 및 문화	47	57.5	106.71	-0.2	2.5
교육	20	70.3	104.47	0.0	1.9
음식 및 숙박	44	131.3	118.61	0.2	4.8
기타 상품 및 서비스	37	54.2	115.92	0.1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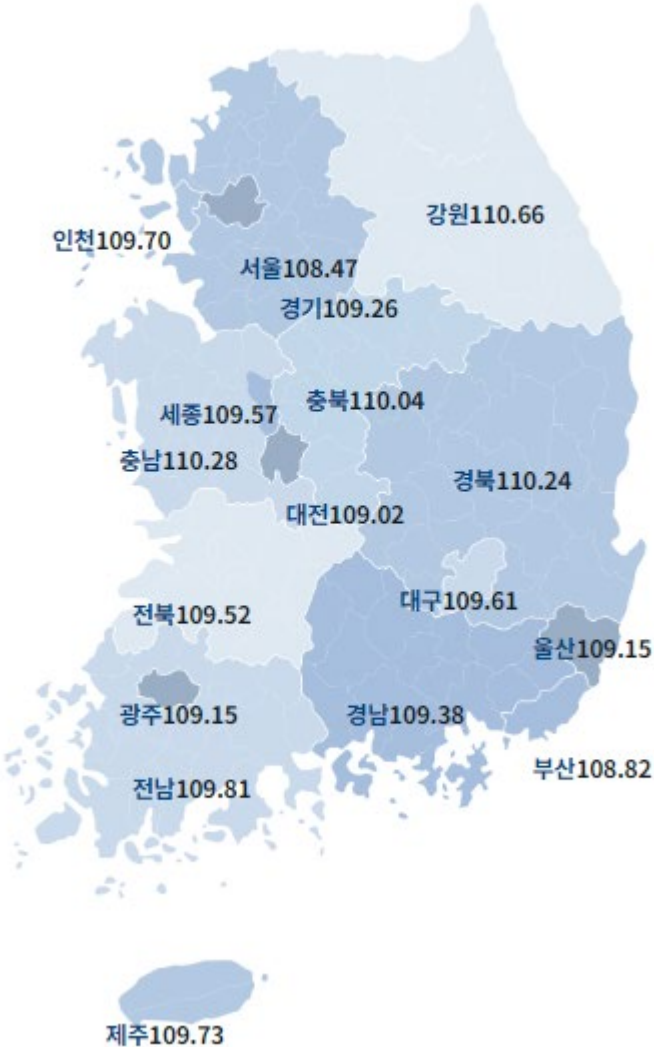
# 2024년 정세와 교섭기조

2023년 서비스연맹 교섭담당자학교

(기준년도 2020=100, %)

품목성질별 부문	품목수	가중치	지수	동락률	
				전월비	전년동월비
(농산물)곡물	7	8.0	105.30	-1.1	7.7
(농산물)채소	27	16.9	113.90	-10.3	9.4
(농산물)과실	19	15.1	132.56	-9.0	24.1
(농산물)기타농산물	4	3.8	116.43	0.5	2.6
축산물	6	27.6	116.66	-2.8	-1.3
수산물	15	12.4	110.83	0.8	1.8
가공식품	73	86.8	119.48	0.6	5.1
내구재	45	84.9	107.02	-0.3	2.5
섬유제품	21	43.6	113.42	1.0	5.4
출판물	7	4.9	106.43	0.0	2.6
석유류	6	39.4	128.95	-3.5	-5.1
의약품	12	15.9	103.16	0.1	2.3
화장품	6	10.9	115.59	0.0	0.5
기타	58	62.0	108.18	-0.4	2.7
전기·가스·수도	4	34.4	135.80	0.0	9.6
집세	2	98.3	103.73	0.1	0.0
공공서비스	30	127.3	103.97	0.0	2.2
외식	39	126.7	118.96	0.3	4.8
외식제외	77	181.1	111.25	-0.3	3.7

전국 109.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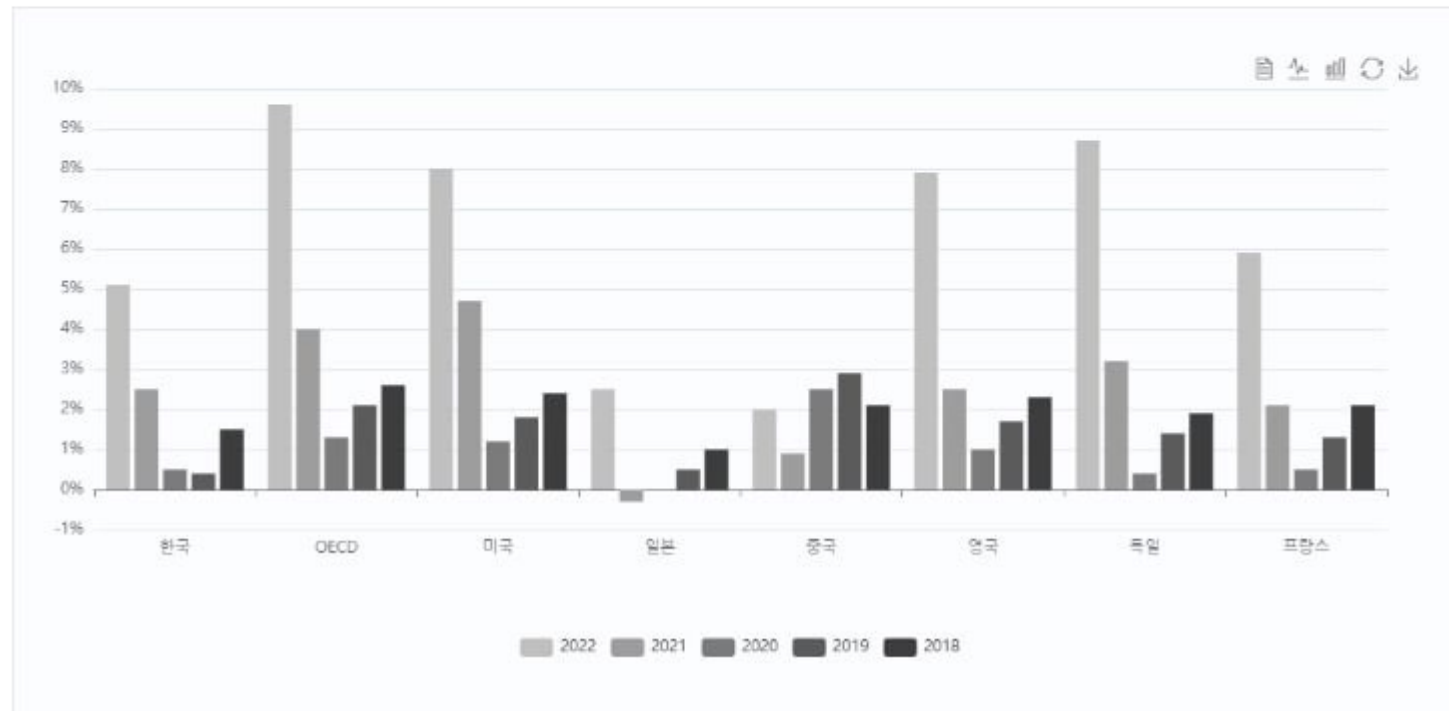


OECD,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의 최근 5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입니다.

(단위: %)

년도	한국	OECD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독일	프랑스
2022	5.1	9.6	8.0	2.5	2.0	7.9	8.7	5.9
2021	2.5	4.0	4.7	-0.3	0.9	2.5	3.2	2.1
2020	0.5	1.3	1.2	0.0	2.5	1.0	0.4	0.5
2019	0.4	2.1	1.8	0.5	2.9	1.7	1.4	1.3
2018	1.5	2.6	2.4	1.0	2.1	2.3	1.9	2.1

- 근원물가=유럽문제, 소비자물가=한국문제
- 경기하강vs상승
- 임금인상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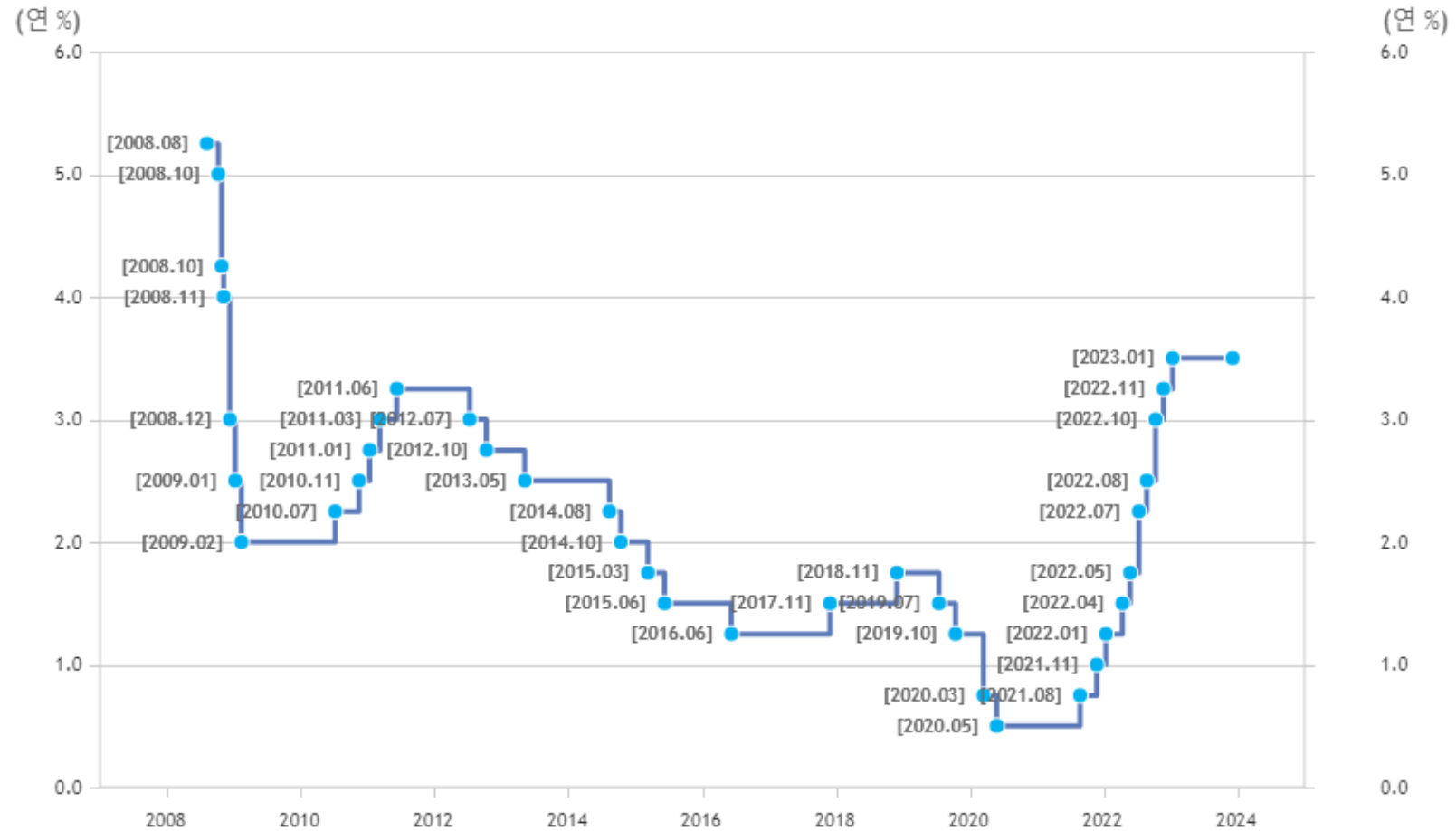


2024년 정세와 교섭기조

2023년 서비스연맹 교섭담당자학교

# 정세 ① 경제전망-고금리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추이



주 : 1) 2008년 2월까지의 콜금리 목표

## 2024년 정세와 교섭기조

2023년 서비스연맹 교섭담당자학교

# 정세 ① 경제전망-고금리

(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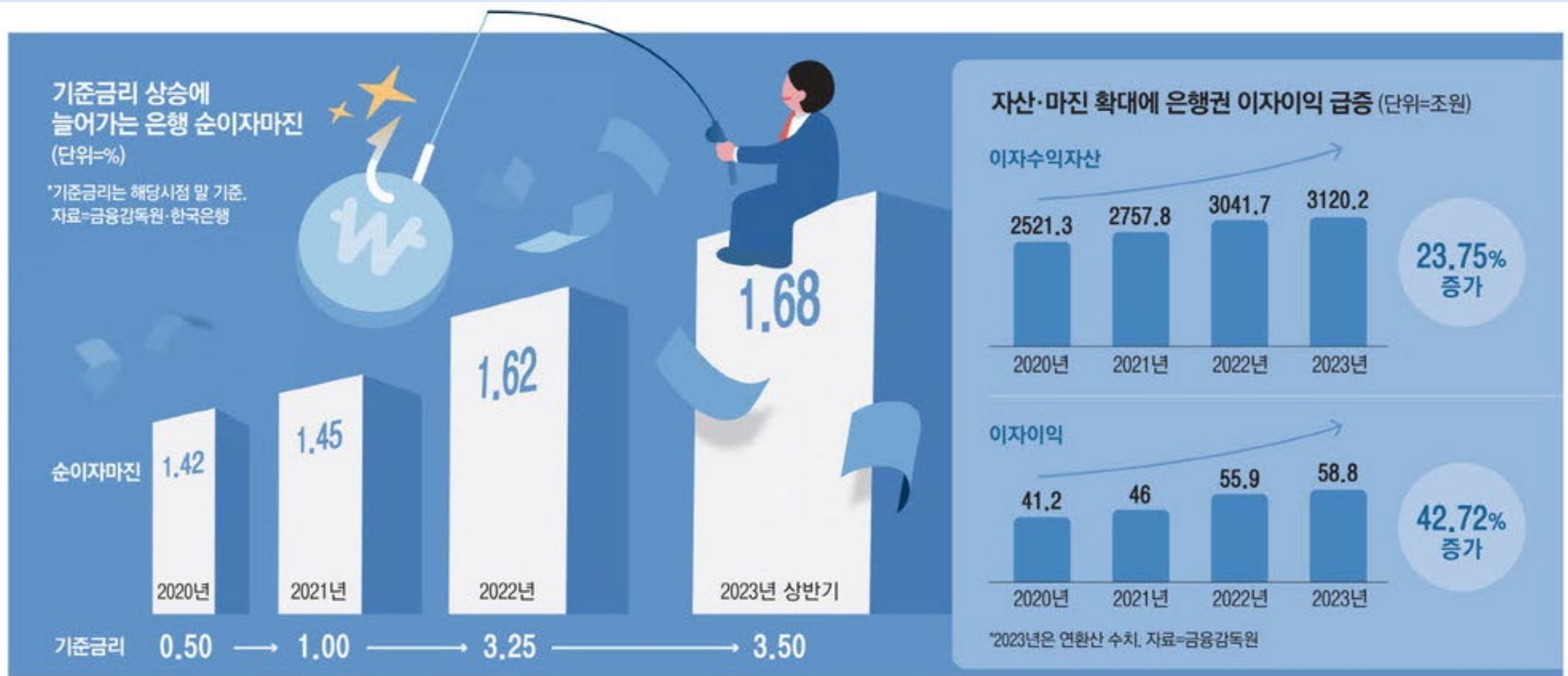
	금액				증감률		
	'22.3/4	'23.2/4	'23.3/4	구성비	'22.3/4	'23.2/4	'23.3/4
비 소 비 지 출	1,018	962	1,062	100.0	6.6	8.3	4.3
경 상 조 세	266	176	269	25.3	1.5	5.0	1.2
비 경 상 조 세 *	21	25	20	1.9	-15.6	95.0	-6.9
연 금 기 여 금	141	140	144	13.5	2.7	1.7	2.2
사 회 보 험 료	170	180	180	16.9	6.5	5.4	5.5
이 자 비 용	104	131	129	12.1	19.9	42.4	24.2
가 구 간 이 전 지 출	231	221	235	22.1	10.6	-0.8	1.8
비영리단체로 이전지출	85	88	86	8.1	12.0	4.8	0.7

주: '\*' 표시는 상대표준오차(RSE)가 높아 이용 시 유의

## 2024년 정세와 교섭기조

2023년 서비스연맹 교섭담당자학교

# 정세 ① 경제전망-고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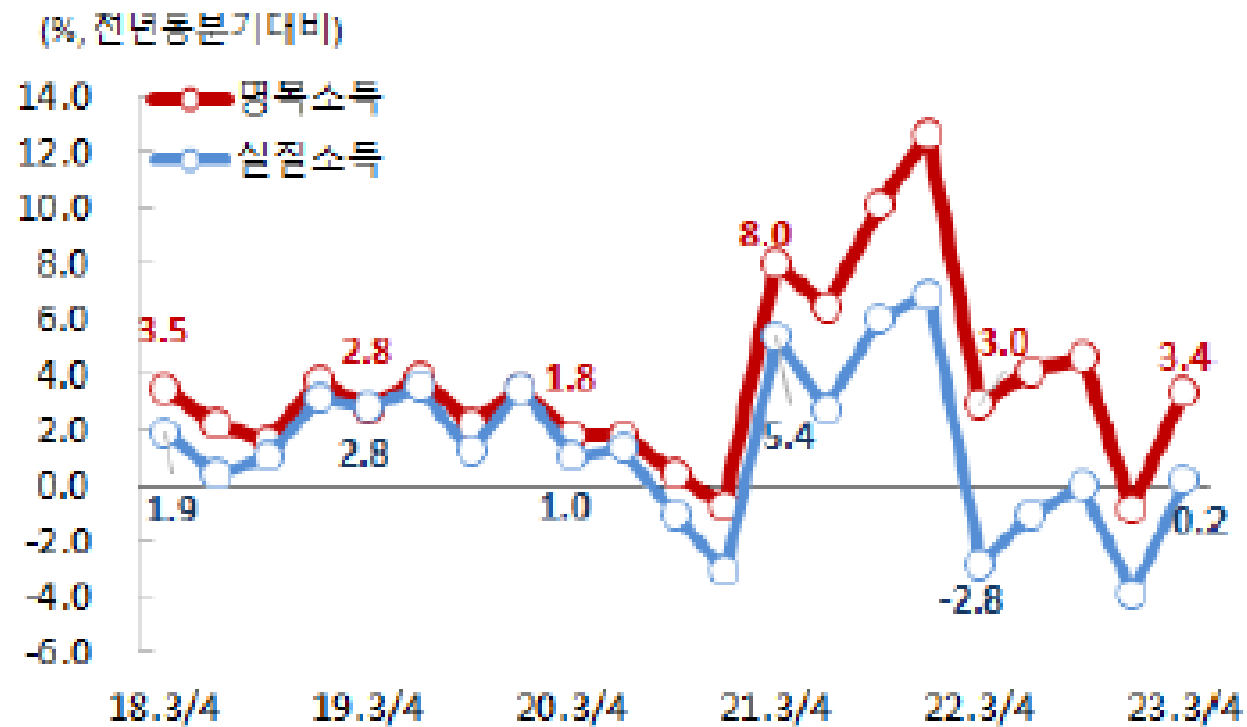
## 2024년 정세와 교섭기조

2023년 서비스연맹 교섭담당자학교



## “실질임금 하락”

- 2023년 3/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03만 3천원  
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4%  
증가(실질소득 0.2% 증가)



주: 2019년까지 시계열은 비농림어가 대상

## “빈부격차 확대”

- 통계청 2023년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 증가
- 최저소득층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0.7% 감소, 5분위는 4.1% 증가
- 고소득층인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은 6.5% 늘었지만 1분위 가구 0.7% 감소

### 가구당 월평균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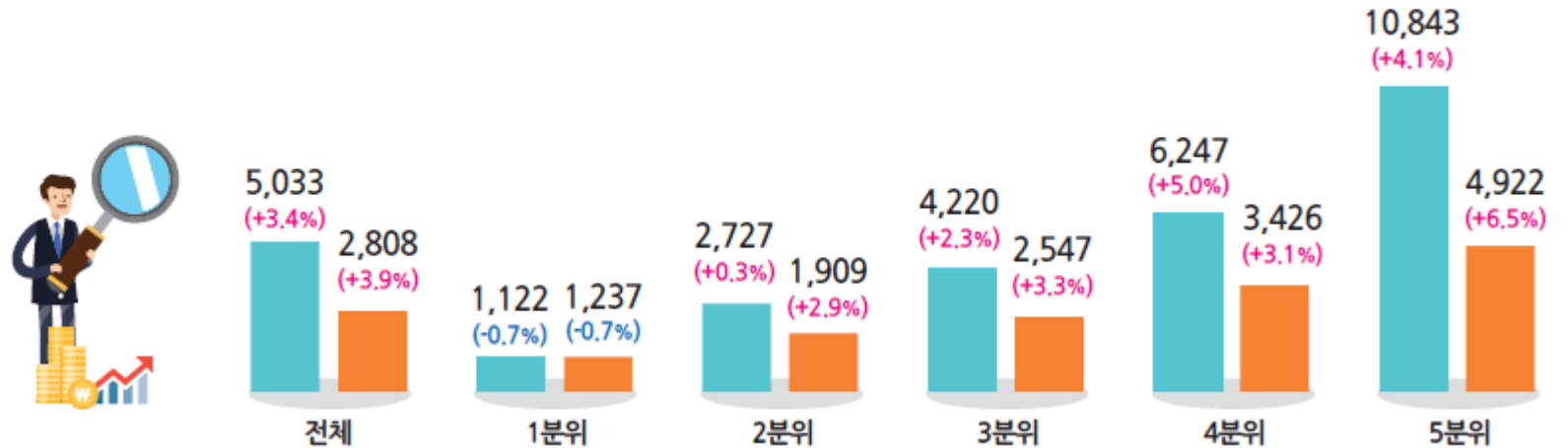
(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소비지출

(단위: 천원, %, 전년동분기대비)

● 소득 ● 소비지출



## • 전국가구 소득 5분위별 가계수지 (단위: 천원, %, %p, 전년동분기대비)

구분	2023. 3/4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1.38		1.69		2.26		2.80		3.22	
가구원수(명)	1.38		1.69		2.26		2.80		3.22	
가구주연령(세)	61.5		52.8		50.0		49.6		49.8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소득 (A)	1,122	-0.7	2,727	0.3	4,220	2.3	6,247	5.0	10,843	4.1
가계지출 ()	1,452	-1.5	2,378	1.9	3,344	2.1	4,731	3.9	7,446	6.9
소비지출 (B)	1,237	-0.7	1,909	2.9	2,547	3.3	3,426	3.1	4,922	6.5
비소비지출 (C)	215	-5.8	469	-2.0	797	-1.7	1,306	6.1	2,524	7.8
처분가능소득(A-C) ()	907	0.6	2,259	0.8	3,423	3.3	4,942	4.7	8,319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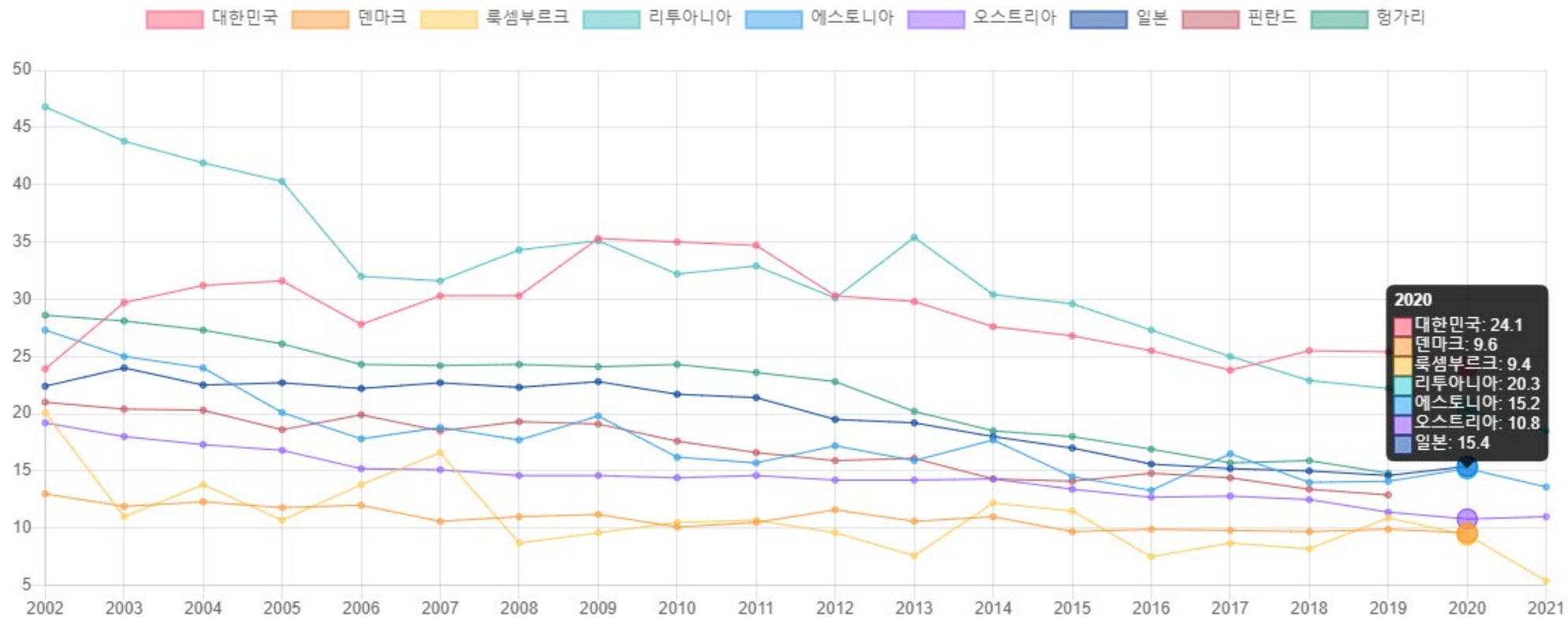
# 성장률, 민간, 정부 성장기여도

한국은행(2023) 국민계정

계정항목	1997	1998	2003	2008	2009	2020	2021	2022	2023 /Q1	2023/ Q2	2023 /Q3
국내총생산 (GDP, %)	6.2	-5.1	3.1	3	0.8	-0.7	4.3	2.6	0.3	0.6	0.6
최종소비지출	3.9	-9.4	0.6	2.3	1.6	-2.2	4.1	4.1	0.6	-0.7	0.3
－ 민간(%)	4.2	-11.9	-0.4	1.6	0.2	-4.8	3.6	4.1	0.6	-0.1	0.3
－ 정부(%)	2.4	4	5.1	4.8	6.7	5.1	5.5	4	0.4	-2.1	0.1
－ 민간기여도(%p)	5.2	-5.1	2	2.4	-1.5	-1.8	3.6	2.1	0.6	1.1	0.5
－ 정부기여도(%p)	0.8	0	1.1	0.7	2.3	1.1	0.7	0.5	-0.3	-0.5	0.2
총고정자본형성 (투자)	-0.5	-20.5	5.3	-0.6	0.4	3.5	3.2	-0.5	-0.7	-0.1	0.4
－ 민간(%)	-2	-23.5	4	-0.8	-4.5	3.6	4.9	0.4	0.9	0.1	-0.4
－ 정부(%)	8	-5.2	12	0.4	24.6	3.4	-4.9	-5.1	-8.8	-1.3	4.8

##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

자살률  
OECD  
1위



단위: OECD 표준인구 10만 명당 명



# “고통에 응답하지 않는 정치”



# “국가실패”



# “거부권 폭주=민생살리기 거부”

### 민주화 이후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노태우

7건

국정감사법, 국회증언·감정법,  
해직공직자보상특별법(이상 1988년),  
지방자치법, 노동쟁의조정법, 노조법,  
의료보험법(1989년)

결과: 폐기

노무현

6건

대북송금 특검법,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2003년),  
사면법, 거창사건특별법(2004년),  
태평양전쟁 희생자 지원법(2007년),  
학교용지부담금환급 특별법(2008년)

노무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 재의결  
5건 폐기

이명박

1건

대중교통 육성·  
이용촉진법(2013년)

폐기

박근혜

2건

국회법(2015년),  
국회법(2016년)

폐기

자료=국회 입법조사처

- 윤석열 재의요구권 행사(2023년 4건)
  -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거부권을 행사한 4개의 법, 간호사법, 양곡법, 노조법 2.3조는 누더기가 되기는 했으나 그래도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은 가장 노골적인 강자편향의 국가권력 남용이다. 그래서 검찰공화국은 더 냉정하게 말하면 경제적 강자의 공화국이다. 우리가 검찰공화국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최소민주주의'의 제도화라 볼 수 있는 87년 체제의 극복에 머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내년 총선의 시대적 과제를 여기저기서 말하기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 “24년 총선, 300석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 거부권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필요한 의석수?
- 윤석열 퇴진을 위해 필요한 의석수?

# “국정목표 :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약속10]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 “기업과 자본의 가치가 존중 받는 사회?”

약속	계획	경과
산업재해 예방강화 및 기업 자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0인(억) 이하 적용 유예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학교예술클ubs 예산 삭감 성별근로공시제(임금 제외, 민간 제외) 노조 파업 불법화 전임자 임금 지급 점검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확산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노동시간 개악(69시간제) 노조법 2,3조 개정 거부 임금체계 개악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산업구조전환시 고용불안 최소화 고용보험적용대상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고도화 실업급여 지속가능성 제고	고용평등상담실 폐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 중단 국민취업지원제도 수혜인원 16만명 ↓, 예산 23% 삭감 실업급여 수급조건 강화

# “노조탄압 머리띠 묶은 윤석열의 투쟁”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내세우며 거의 전 정부역량을 동원해 건설노조의 일상 활동을 옥죄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조치가 사법적 탄압임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윤석열 정부는 건설노조 수사에 전세사기보다 많은 경찰 특진자를 배치해 건설노조의 일거수일투족을 단속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노조의 주요 간부의 별명과 이름을 적시해 신고를 종용하는 공문을 건설사들에게 보냈고, 노동부는 일상적인 고용 협의를 채용절차법 위반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심지어 국세청은 가장 악의적인 언론 보도를 근거로 건설노조가 인력공급을 하고 전임비를 받았기 때문에 법인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소명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 건설노조의 불법행위가 문제라기보다, 건설노조인 게 문제라는 식이었다.

## 건설노조 탄압 상황

압수수색

20여 차례

소환조사

2,000명

기소 및 인신 구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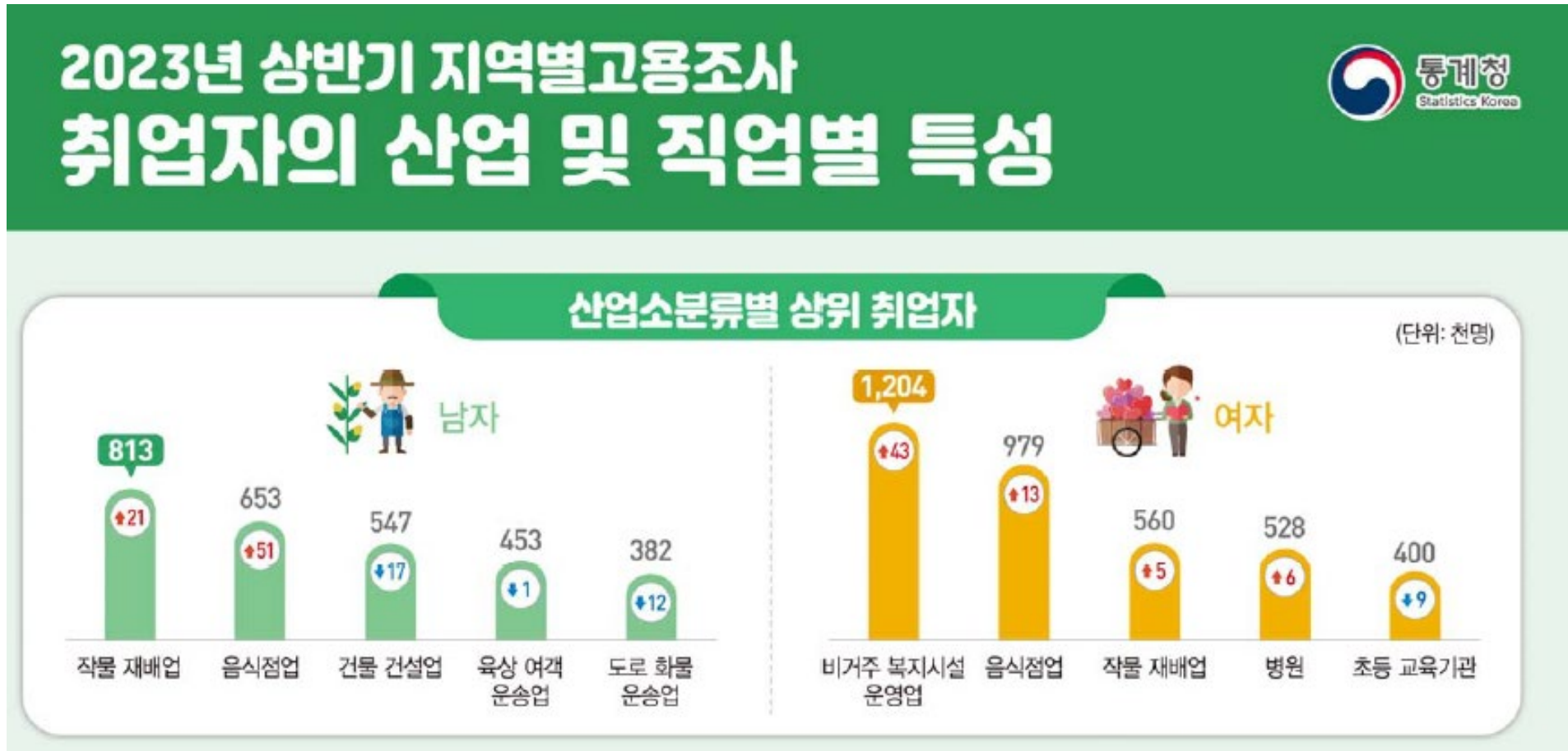
150여명 기소,  
37명 구속

과태료 및 과징금

1억 3천5백만원

23년 9월 기준

# “저임금 서비스일자리&불안정 일자리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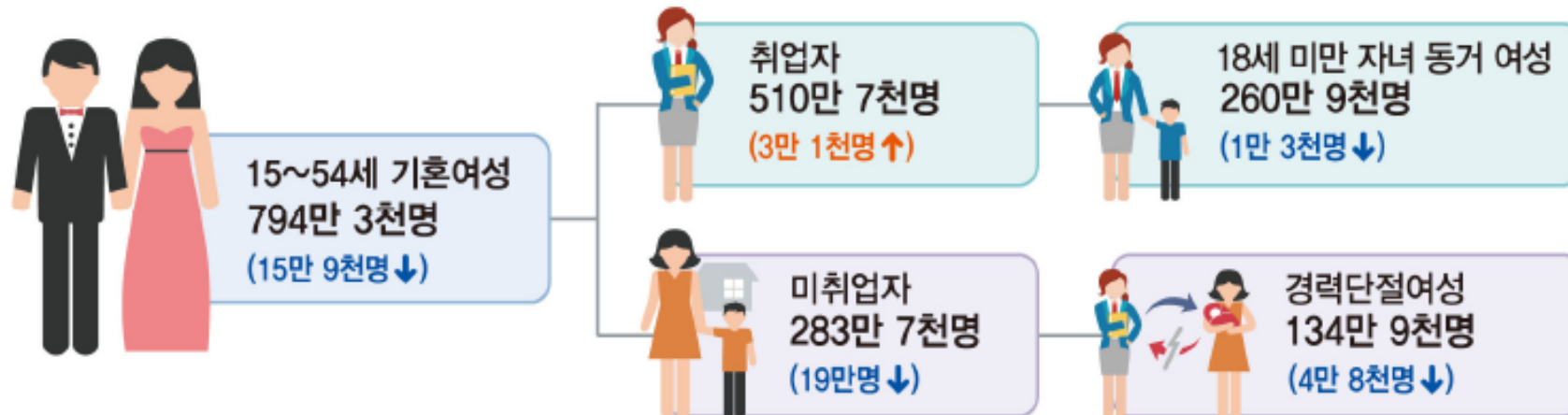
# “저임금 서비스일자리&불안정 일자리 창출”

##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 15~54세 기혼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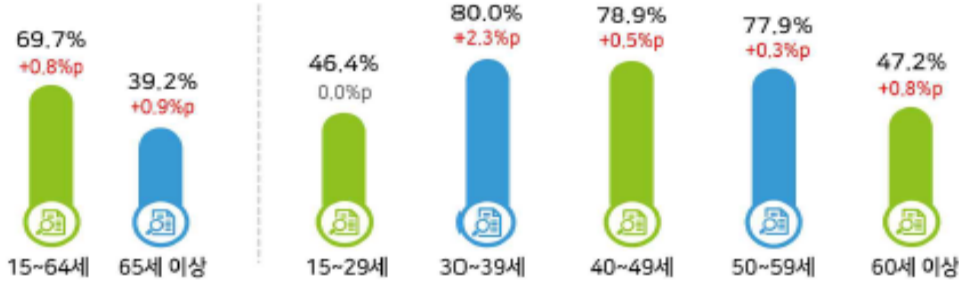
(증감은 전년대비)





# “저임금 서비스일자리&불안정 일자리 창출”

### 연령계층별 고용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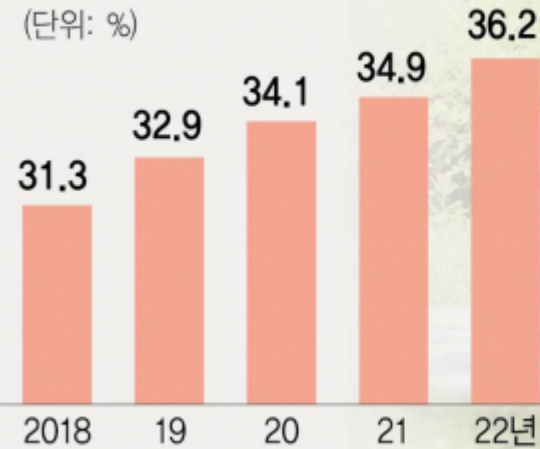
### 산업별 취업자 현황

( ) 수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 높아지는 노인 고용률

(단위: %)



자료: 통계청

## 2024년 정세와 교섭기조

2023년 서비스연맹 교섭담당자학교

# “저임금 서비스일자리&불안정 일자리 창출”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비임금 노동자’...5년간 200만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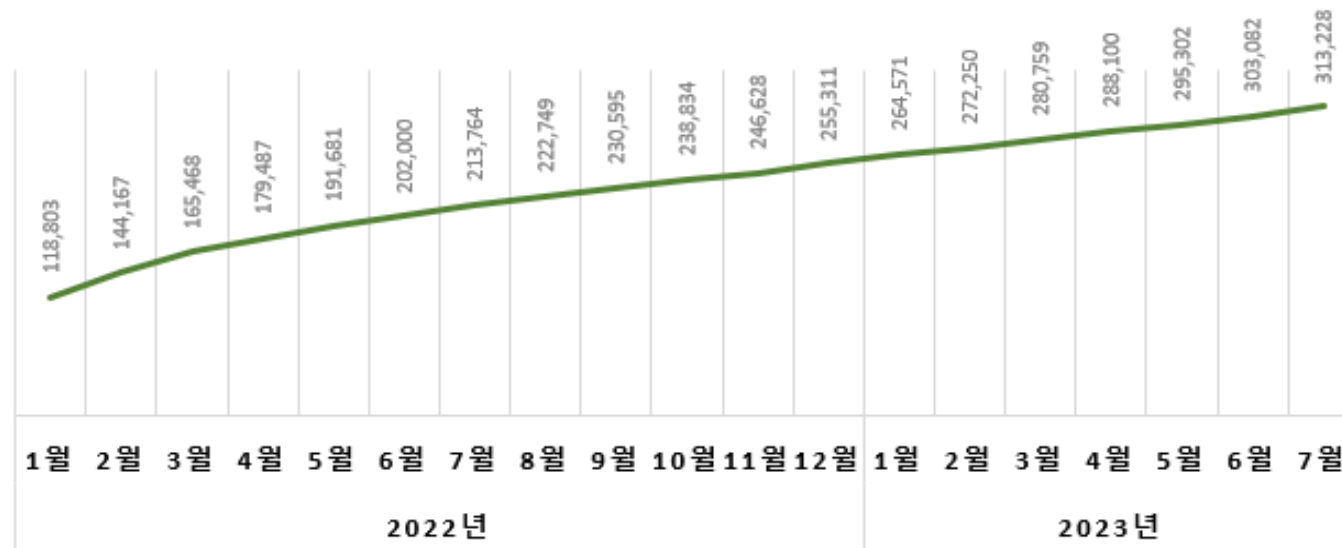
2022.10.16 16:20 입력

반기웅 기자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에서 배달 라이더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퀵서비스 기사 고용보험 가입현황(단위: 명) 강성희의원실 제공 자료



## 2024년 정세와 교섭기조

2023년 서비스연맹 교섭담당자학교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일하는 노인, 한국이 가장 많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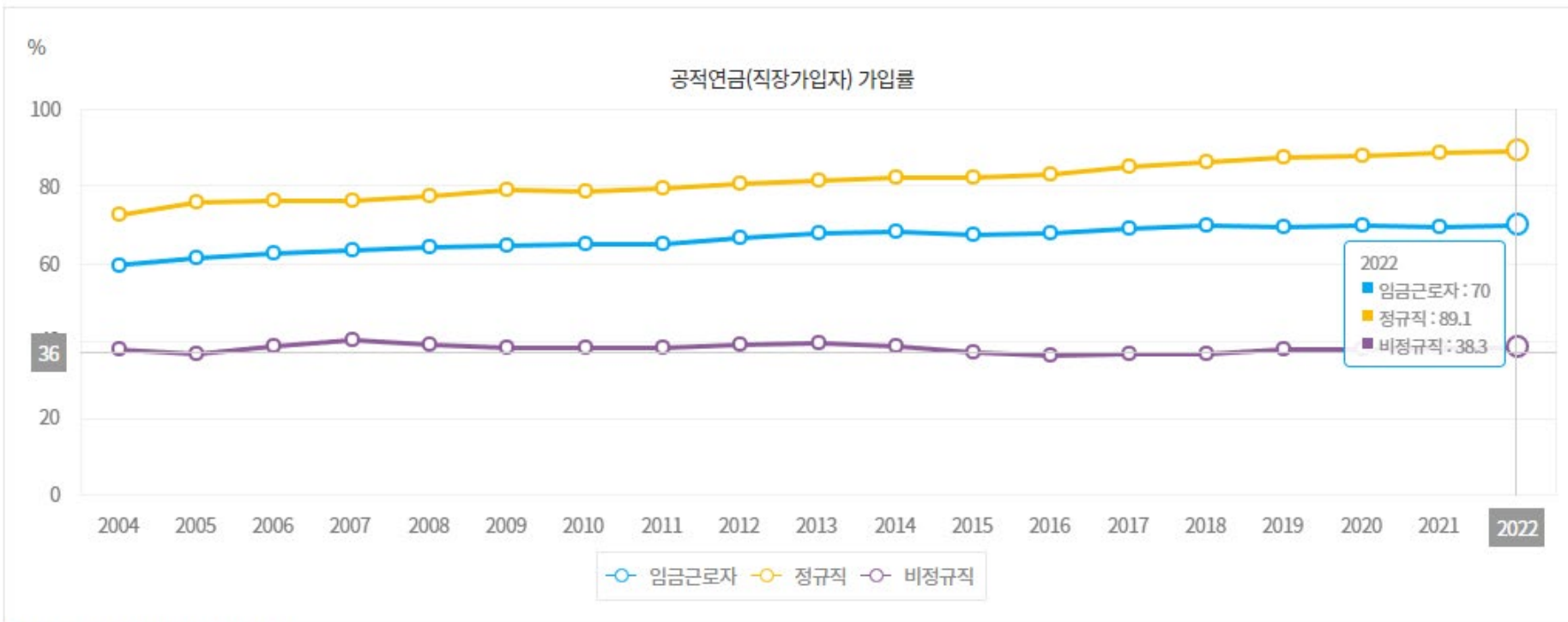


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The JoongAng

- 미흡한 국내 노후 소득 보장제도
- 공적 연금 수급자 비율 57.6%(22년)
- 66살 이상 상대적 빈곤율 40.4%(22년)

# “저임금 서비스일자리&불안정 일자리 창출”



출처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 비정규, 비전형 일자리 증가
- 고령, 서비스노동자 - 저임금(+여성일자리 확산)
- 특고, 플랫폼 노동자 증가

## “대기업, 부자 감세로 재정 축소”

- 재정축소 : 내국세 감소(10.1%)
- 법인세(152개 초거대기업 감세)

<2023년 8월 국세 및 법인세 세수실적>

(단위: 조 원)

구 분	' 22.8월	' 23.8월	증감액
국세수입	289.2	241.6	△47.6(△16.5%)
법인세	82.5	62.3	△20.2(△24.5%)

\* 출처: 국세청, 진선미 의원실 재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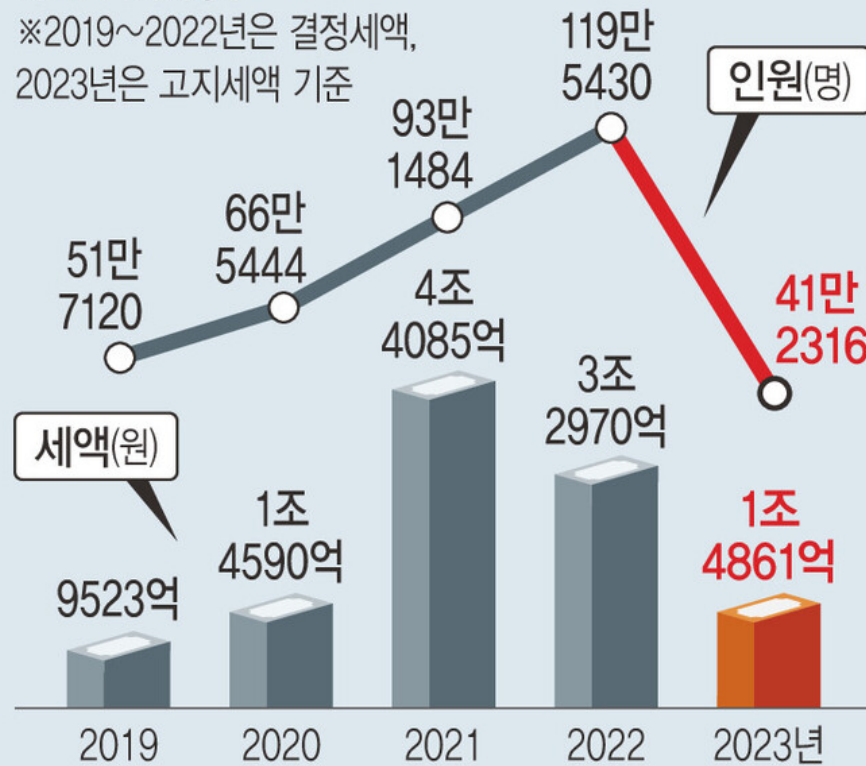
▲올해 8월까지 국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조6000억 원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20조2000억 원이 법인세 감소분이었다. ©진선미 의원실

# “종부세 감세 : 120만명->41만명, 감세액 2조”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근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2019~2022년은 결정세액,  
2023년은 고지세액 기준



## “일자리 복지 예산 축소”

<표 4> 2023년 본예산 대비 2024년 예산안 감액사업 상위 프로그램

(단위: 십억원)

분야	프로그램	23년 본예산	24년 예산안	감액	증액	순증감액	증감률
일반지방행정	지방교부세	75,288	66,771	-8,603	86	-8,517	-11.3%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5,761	68,886	-6,875	0	-6,875	-9.1%
교육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기반조성	4,888	5,048	-4,888	5,048	160	3.3%
보건	공공보건의료확충	1,963	524	-1,529	89	-1,440	-73.3%
사회복지	고용창출	3,106	1,968	-1,327	190	-1,138	-36.6%
보건	감염병위기대응	1,492	214	-1,281	4	-1,278	-85.6%
일반지방행정	지역발전	1,465	1,421	-1,048	1,004	-44	-3.0%
사회복지	임대주택지원(출자)	5,744	5,041	-882	180	-702	-12.2%
국방	지휘정찰사업	2,605	2,337	-798	530	-268	-10.3%
사회복지	고용안전망확충	13,959	13,246	-797	83	-713	-5.1%
국방	함정사업	2,228	2,191	-706	669	-37	-1.6%
국방	항공기사업	2,485	3,303	-683	1,501	818	32.9%
교통및물류	국도건설	1,976	1,820	-622	466	-156	-7.9%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지원	3,499	3,223	-572	296	-276	-7.9%

고용 부문에서 가장 크게 감소한 세부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세부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구직급여로 각각 2830억원(-23.1%), 2810억원(-65.3%), 2700억원(-2.4%)감소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외교예산 대폭 증액

단위: 십억원

○ 통일외교 분야(19.5%, 1.2조원)가 많이 증가된 이유는 ODA 사업증대로 인한 것이며 ODA사업만 3.6조원에서 5조원으로 1.4조원(40%) 증대되었음

	23년 본예산	24년 예산안	감액된 세부사업액	증액된 세부사업액	순증감액	증감률
총합계	638,728	656,851	-56,492	74,615	18,124	2.8%
교육	96,273	89,655	-12,474	5,857	-6,618	-6.9%
일반·지방행정	112,154	111,262	-11,118	10,226	-893	-0.8%
사회복지	205,976	223,876	-6,392	24,292	17,900	8.7%
국방	55,286	57,572	-4,749	7,035	2,286	4.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6,004	27,269	-4,305	5,570	1,265	4.9%
교통및물류	20,821	21,773	-3,876	4,828	952	4.6%
보건	20,027	19,006	-3,728	2,707	-1,021	-5.1%
농림수산	24,377	25,377	-2,129	3,129	1,000	4.1%
과학기술	9,862	9,124	-1,609	871	-737	-7.5%
환경	12,249	12,555	-1,608	1,914	306	2.5%
통신	8,985	9,294	-1,360	1,669	309	3.4%
문화및관광	8,606	8,738	-1,247	1,379	132	1.5%
국토및지역개발	4,167	4,362	-738	933	195	4.7%
공공질서및안전	22,931	24,333	-592	1,994	1,402	6.1%
통일·외교	6,409	7,656	-566	1,813	1,247	19.5%
예비비	4,600	5,000	0	400	400	8.7%

○ 예비비 분야가 4.6조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되었음. 예비비 증대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약화를 의미

○ 사회복지 분야는 206조원에서 223.9조원으로 17.9조원(8.7%) 증대되었음.

○ 국방 분야는 55.3조원에서 57.6조원으로 2.3조원(4.1%) 증대됨. 이는, 항공기 사업에 0.8조원(32.9%), 인건비가 0.8조원(4.7%) 증액되었기 때문임.

○ 과학기술 분야는 8.9조원에서 9.1조원으로 -7.5%(-0.7조원) 감액되었음. 이는 R&D 감액에 의한 것으로 특히, 출연연구기관 지원이 0.6조원(-17.2%),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이 0.3조원(-34.9%) 감액되었기 때문임.

○ 교육 분야는 96.3조원에서 89.7조원으로 -6.9%(-6.6조원) 감액되었음. 이는 내국세 감소로 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임.

○ 보건 분야는 20조원에서 19조원으로 -5.1%(-1조원) 감액되었음. 이는 보건의료 부문 중 코로나19와 관련있는 사업 삭감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관련 R&D삭감, 만성질환 예방관리(-48.6%), 국가결핵예방(-29.2%), 국가금연지원서비스(-12.2%), 희귀질환자 지원 (-31.2%),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사업(-65.8%), 119구급대지원 사업(34.7%)이 삭감되었기 때문임.



# “자산기반 사적복지=자아살해의 사회”

## 자아살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

성장률을 벗어나 사회의 맨 살을 보면 침강이 더 뚜렷하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 0.7이라는 숫자 뒤로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경고하는 이 사회의 아픔을 마주한다. 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사회, 그러나 그 속의 사람들은 살고 싶다. 그러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사회안전망이 가장 열악한 축에 드는 이 나라는 공적 복지의 빈자리를 각자도생으로 채워낸다.

나원준(경북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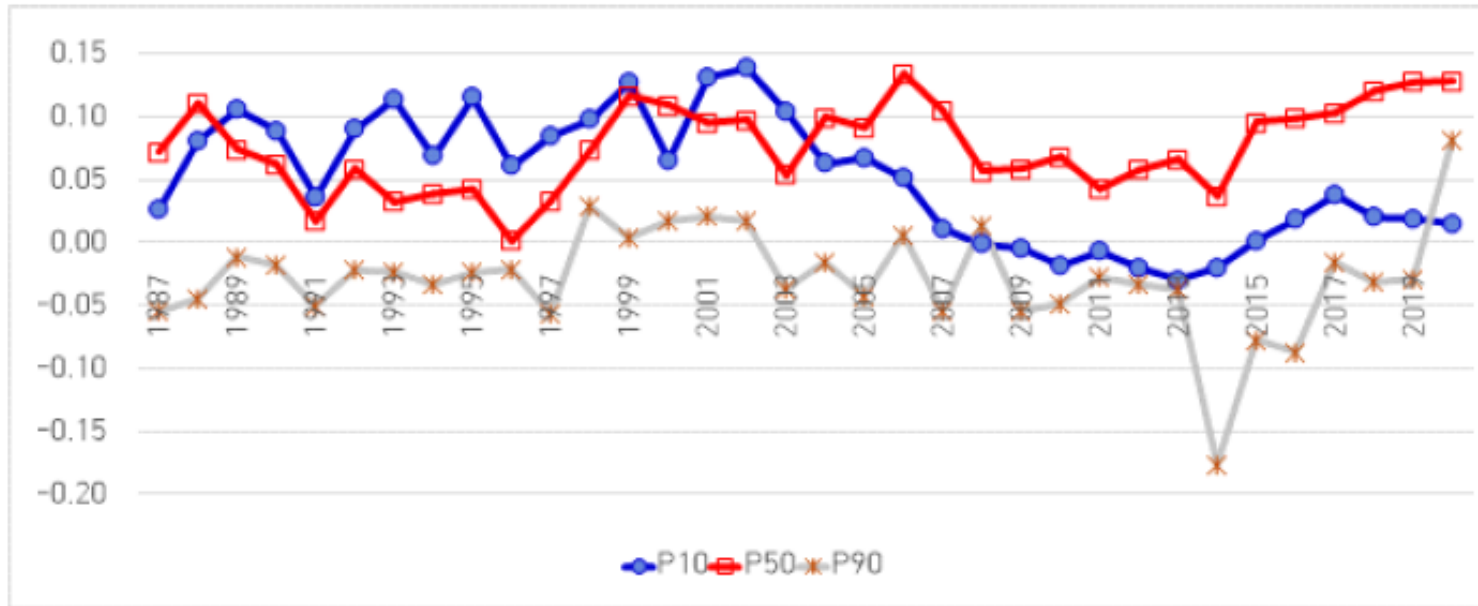
“우리에게는 노동조합이!”





# “임금불평등 해소 - 노조의 임금인상”

[그림 10] 임금분위별 노조의 임금효과 추이 (민간 부문 10인 이상 상용노동자)



자료 : 고용노동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하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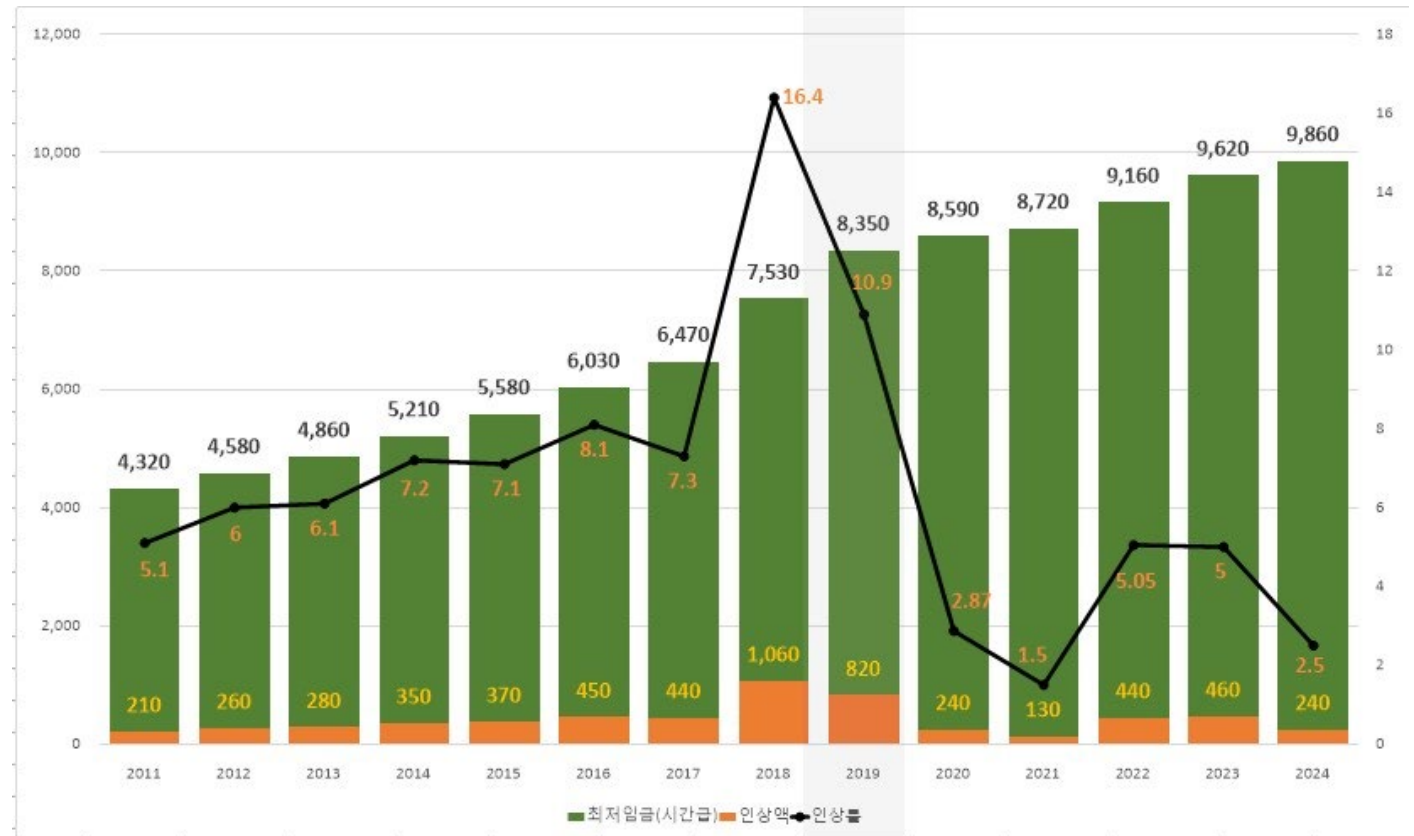
노조는 임금 불평등감소에 기여,  
하위 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고  
상위 임금노동자의 임금을 억제하여  
임금을 평준화하는 효과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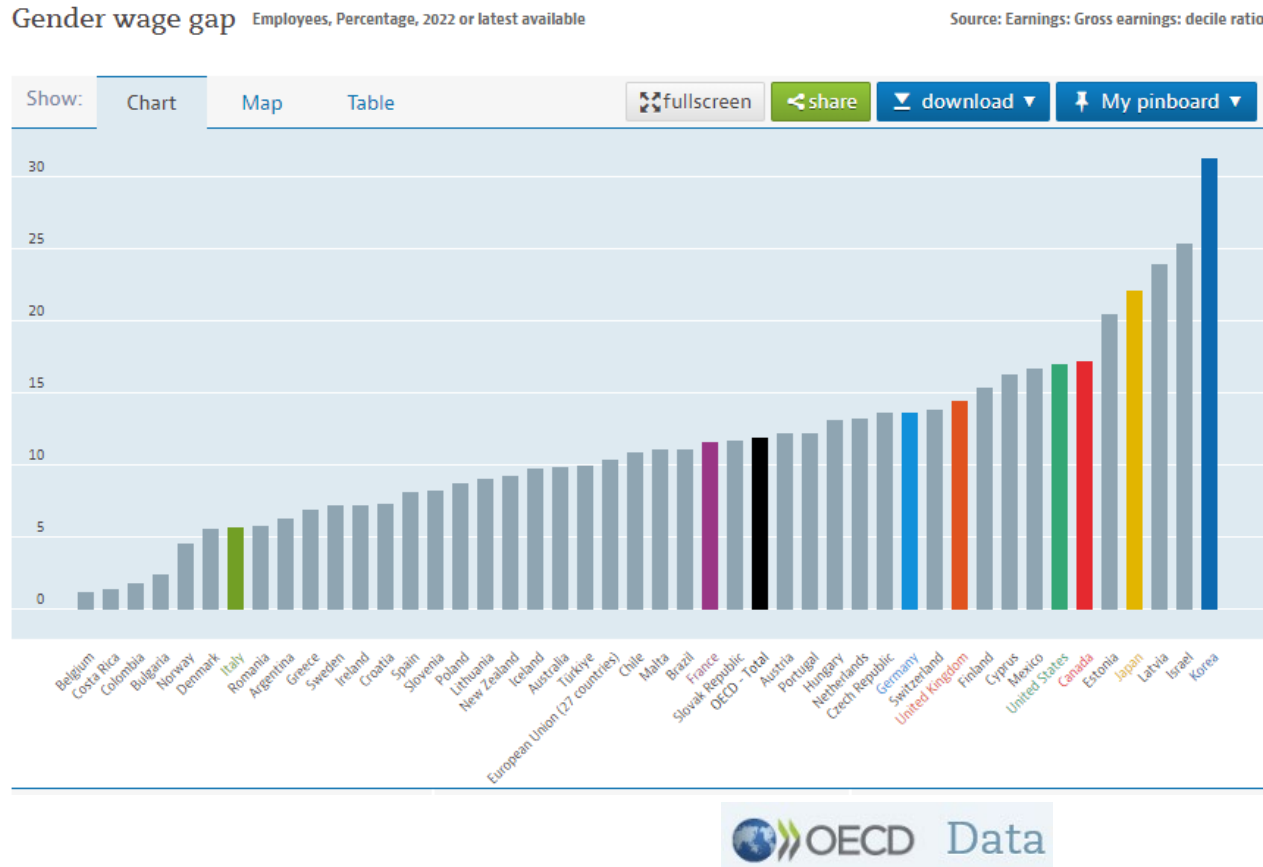
## “최저임금 인상”

### 각국 최저임금 인상 흐름

유럽연합		지난해 10월 '적정 최저임금 입법지침' 채택
독일		1년10개월 만에 최저임금 25% 인상
스페인		올해 월 최저임금 8% 인상
영국		23세 이상 노동자 최저임금 10% 인상
호주		지난해 6월 2006년 이후 최저임금 최대 인상
미국		연방정부 도급업체 노동자 최저시급 15달러 지급, 올해 1월 23개 주 최저임금 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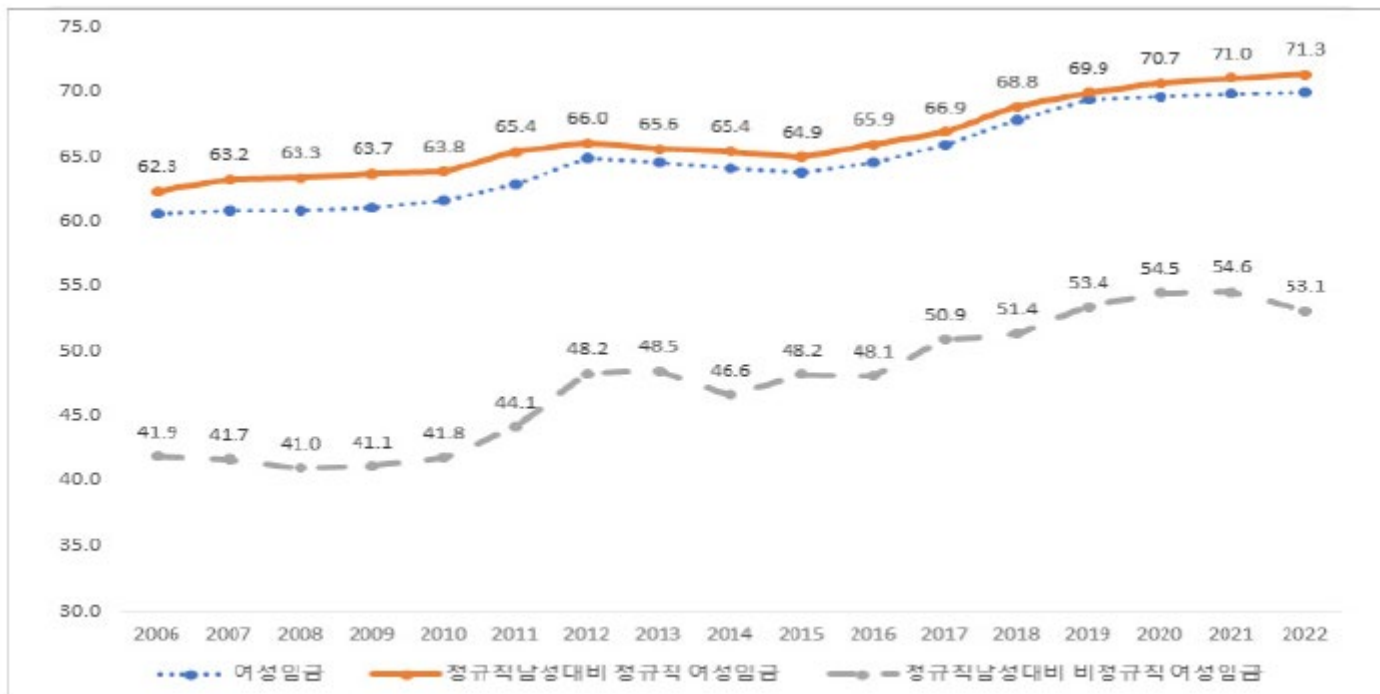
## “성별임금격차 해소”



한국(2022)  
31.2 %

# “성별임금격차 해소”

##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임금이 낮은 것  
+ 비정규직 중 상대적으로 여성이 더  
많기 때문(2022년 비정규직 중 여성의  
비율 55.2% 비정규직 중 남성비율  
(44.8%)보다 10.4% 높음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 “여성 노동의 가치 제고”

저임금·고용불안 시달리는 돌봄노동자..."노동자 희생, 착취로는 지속 불가능"

입력 2023.04.11 17:41 수정 2023.04.11 17:48

오지혜 기자 구독 +

♡ 0 💬 0

‘반값노동 110만! 돌봄노동자 노동실태 증언대회’  
낮은 사회적 인식도 근로의욕 꺾어



경향포토

최저임금 1만원 보장 요구하는 마트 노동자들...

2017.06.19 12:21

김기남 기자



이연주 막말 사회

“밥하는 아줌마들? 이연주, 학교 급식실서 한 시간이라도 일해보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이연주 측각 사퇴·국민의당 대국민 사과 촉구



30일 오후 서울 경희대광장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연 총파업·제외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영지웅 기자

## 2024년 정세와 교섭기조

2023년 서비스연맹 교섭담당자학교

# “적정임금 보장”

-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세계인권선언 제23조 3. 모든 노동자는 자신과 그 가족이 인간적으로 남부끄럽지 않게 품위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보수가 부족할 경우, 필요하다면 여타 사회보호 수단으로 부족한 보수를 메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적정임금 보장”

-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임금 보장
- 사회적기준에 의한 임금체계 개발 / 건설업 적정임금제, 화물운송업 안전운임제
- 특고·플랫폼 노동자 : 공정 수수료 결정(뉴욕시 배달라이더 최저임금제, 영국 플랫폼노동자에게 일한 시간 만큼의 최저임금 또는 건별 공정단가 지급 의무화)
- 산업별 임금 체계 개발 / 돌봄임금제 등
- 숙련의 인정과 처우 반영



# “입법과제 성사를 위한 의석 확보”

### <서비스연맹 업종별 법제도 개선 요구>

- 교육공무직 법제화로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한다.
-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급식실 폐암 대책을 마련해 학교 급식실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
- 노동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서비스노동자의 주말휴식권을 강화하고, 서비스산업에서 야간노동을 최소화한다.
- 택배 사회적대화 이행을 강제하고,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개정해 택배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한다.
-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권리를 확대한다.
- 돌봄정책기본법·돌봄노동자기본법을 제정해 돌봄의 국가책임을 법제화하고, 돌봄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한다.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수수료제도를 마련한다.
-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해 플랫폼 노동자의 협상권을 강화한다.
- 렌탈산업 관련 법안을 정비해 가전렌탈업의 소비자와 종사자 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 관광산업 기본법을 개정해 관광노동자 권리를 강화하고 휴식권, 건강권을 강화한다.

# “24년 총선, 300석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 거부권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필요한 의석수?
- 윤석열 퇴진을 위해 필요한 의석수?

## “산별의제 수립, 중층교섭, 조직강화”

- 수요독점 시장 : 저임금 노동시장, 수수료로 노무 대가가 지급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시장 -> 사용자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책정
- 초기업적 교섭 활성화, 사회적 임금 결정기제의 확산, 보편적인 사회적 보호방안 필요
- 기업간 임금격차 해소

## “산별의제 수립, 중층교섭, 조직강화”

-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정부정책에 참여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교섭 책임 부과
- 사회보험 확대(특고+플랫폼노동자 공통의제)
- 대기/이동노동/감정노동 문제 등 서비스노동자의 문제 의제화
- 산별교섭->교섭력 강화->조직강화